

취약한 의료 공공성 확보 시급

작년 국내 공공 의료기관 5.2%... 2015년대비 0.5% ↓
OECD 평균 공공 의료기관 비율 57%와 큰 차이
박희승 의원 "공공보건의대 설립 통한 역량 확충을"



병상 수도 같은 기간 10.5%에서 2023년 9.5%로 감소했다. 울산이 1%로 가장 낮았고 인천(4.3%), 부산(5.4%), 광주·경기(7.0%) 순이었다. 반면 제주(30.3%), 세종(23.7%) 강원(21.4%) 순으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기관과 병상 수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지역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례적인 상황으로 취약한 의료 공공성 확보가 시급하다.

특히,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5.7%에서 2023년 5.2%로 줄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편차가 매우 크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은 95개의 의료기관 중 공공 의료기관이 단 1개로 공공 의료기관 비율이 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이어 부산(2.2%), 광주(2.9%), 경기(3.4%), 인천(3.7%), 대구(3.9%) 순이었다.

반면 강원은 101개 중 18개가 공공 의료기관으로 그 비율이 17.8%로 가장 높았고, 제주(17.2%), 경북(10.7%) 순이었다.

또한, 공공 의료기관의 병상 수도 우리나라는 9.5%에 불과했지만, OECD 평균은 71.6%에 달했다. 영국(100%), 캐나다(99.4%), 프랑스(61.1%), 독일(39.8%) 순이었고, 일본(27.8%), 미국(21.1%) 순이었다.

/이만호 기자·남원=김기두 기자



화랑훈련 사후검토 회의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간의 화랑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7일 오전 사후검토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김민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 김광석 35사단장, 최종문 전북경찰청장, 이오숙 소방본부장 등 주요 통합방위작전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완주-전주 통합 '밀거름'

민주 이성윤 의원,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합지자체 안정적 재정 지원... 통합의 '완전복원' 촉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주시) 국회의원은 완주-전주 통합, '완전복원'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완전복원 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

바 201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로 그 대상을 확대해 신규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형 치유농업 연구회

치유농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남원시의회 남원형 치유농업 연구회(대표의원 김길수·사진)는 치유농업 관련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최근 충북 괴산의 자연드림파크와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푸르메소설팜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남원형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 일환으로 연구단체 의원인 손종열, 오창숙, 이기열, 김정현, 이숙자, 이미선 의원 등이 참여했다.

괴산 자연드림파크는 최근 다양하게 인간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들로부터 안전한 먹거리와 힐링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웰빙의 삶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로 부터 각광 받고 있는 곳이며, 푸르메소설팜은 장애인에 건강하고 가치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부와 힘으로 만들어진 공간으로, 스마트팜 기반으로 한 발달장애인 일터이다.

또한 국내 최초라는 이름에 걸맞게 발달장애인 모두 정직원으로 채용하여 하루 4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미술, 운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힘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최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는 지난 27일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30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또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문은영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건 및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검취안 1건 총 1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임시회 첫날인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희 의원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이해양 의원은 '중부내륙연계발전 특별법에 따른 무주군 대응 전략 촉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오광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에 환경축제로서 자리매김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세계적인 환경축제로 거듭나는 만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군민 의견 수렴과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전들이 상정된 만큼 동료 의원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퇴진광장을 열자" ...尹정권 퇴진 시국대회

전국민총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서울 중구 승례문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집회는 서울 외에도 전북과 대전, 광주 등 전국 10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임대보증금보험 가입 주택 50% 이상이 '깡통주택'

민주 이춘석 의원, "서민 주거안정 위한 대책 마련해야"

임대보증금보험에 가입한 주택 10세대 중 5세대 이상이 '깡통주택'이었다고 이춘석 국회의원이 밝혔다.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화된 이후 총 130만 9,824세대가 가입했고, 이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78.4%로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세대 중 3세대는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돼 집값 하락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보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 평균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전북 90.7%, 강원 88.6%, 경남 87.4%, 경북 86.7%, 부산 85.7%, 충남 85.2%, 전남 85.0%, 광주 81.1%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북의 경우 6만 1,954세대 중 70.9%인 43,905세대가 부

채비율 80% 이상을 차지해 전국에서 깡통주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편, 최근 3년간(2021년~2024년 8월) 1만3,567세대에서 총 28조 9,969억 원 규모의 임대보증금보증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주기가 요구된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6.6배 증가한 5,979세대에서 1조 4,389억 원 규모(전년 대비 약 17.3배)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는 이미 지난 8월까지 6천이 넘는 세대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사고 세대 수를 훌쩍 넘어섰다.

이춘석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HUG 보증사고와 대위변제도 급격하고 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나서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국힘 조배숙 의원, 전북 현안 법률 개정 정책간담회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전북자치도 주요 현안 법률 개정안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조배숙 의원이 주최·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법무부, 국토교통부와 전북자치도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공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등 전북자치도 현안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발의한 개정안 중심으로 논의됐다. 주요 내용은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거점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규정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배숙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올해 1월 18일 출범한 상황으로, 도청 소재지인 전주는 생활 인구가 집중되는 중추도시로 광역적 교통관리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상 대도시권에서 포함돼

선택직불제 확대 시행 법적 근거 마련

민주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택직불제의 내용과 범위가 확대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대표 발의한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택직불제의 내용과 범위가 확대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대표 발의한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식량안보·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 유형이 확대됨에 따라, 참여농가 확대를 비롯해 농업인의 소득 보

초저출생 해결·지방소멸 극복 '단초'

민주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출산·육아·양육 지원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출산·육아·양육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 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한 의원은 육아·양육 부담 감감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육아·양육 지원 패키지법' 4건을 대표발의했는데, 그중 2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병도 의원은 "초저출생 해결, 나아가 지방소멸 극복의 단초가 될 법안이 통과되어 뜻깊다"라고 소회를 전하면서, "제도 정착 과정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앞으로도 국가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 해결을 위해 입법 정책적 대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를 피해장애인 쉼터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총 3건의 한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이 처리됐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침